

인수위 교육정책 변화에 지역 교육계 불이익 우려

고교 등급화... 광주학생 대거 수도권 이탈

광주·전남 투자자본 취약 자사고 설립 어려워

(自私高)

농어촌 특별·지역균형선발전형 폐지 가능성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는 교육부 기능 개편과 당선인 공약 실천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전반적 기조는 각종 규제를 풀어 수요자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광주·전남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사안별로 지역 교육계의 불안감을 짚어본다.

▷고교간 등급 현실화 우려
교육부 보고에 따르면 자율학교나 특성화 고교 설립 지정 등의 기능, 교원의 정원·임용·인사 관련 기능 등이 지역 교육청으로 이양된다. 언뜻 지역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만한 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새 정책에 따라 자연스레 형성될 고교등급제는 이 지역 입장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전남의 학생은 광주로, 광주의 학생은 수도권으로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상당한 수도권과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사고 경쟁도 밀릴 것
자율학교 혹은 자립형 사립고를 대거 허용한다는 새정부 공약도 큰 격정이다.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해도 투자자본이 취약한 광주·전남은 그 수가 적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를 보면 전남에 과연 자사고가 몇개나 설립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이에 따라 지역 우수학생들의 역외 유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안한 교육재정
교육재정은 가장 큰 불안요소 중 하나다. 교육재정을 일시에 지방에 떠넘기는 일은 없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주·전남의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는 교원 봉급 이외의 모든 교육예산은 조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교원수급도 문제다. 재정논리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수만큼 교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

된다. 또 열악한 재정은 학교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대준 정책실장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도 등을 따졌을 때 현재도 서울 강남 지역과 전남 군 단위 지역 학교의 급식 식단은 큰 차이가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마저 지역 교육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못지않을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라지는 대입특혜
학생선발과 관련한 권한을 사실상 대학에 주게 될 경우 지금까지 교육부 지침으로 사실상 각 대학에 강제됐던 농·어촌 특별 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존속될 지 의문이다. 수능 등급제 첫 시행으로 대학들이 전형을 다양화하면서 내신 점수의 반영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대한 내신 점수 반영비율을 낮추려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특목고 등 우수고교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우수 학생 유치에 최우선인에서 평등 정책의 산물인 농·어촌 특별 전형이나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역 대학들도 불안
전남대·조선대 등 지역대학들이 장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까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부 등 각 정부 부처로부터 수백억원씩의 지원을 받아온 지역대학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조선대 김하림(중국어과 교수) 대외협력부장은 "교육이란 국가의 미래 인력을 키워내는 일인데 이처럼 중요한 일을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라며 "이 논리에 따르면 인기 없는 기초학문 분야의 학과들은 점차 도태돼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3不정책은 사회적 규약”

靑 “인수위 교육정책 신중해야”

인수위, 대응 안해

청와대는 3일 교육부의 기능을 상당부분 지방과 대학 등에 이양키로 하는 내용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방침이 기존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교육정책 문제에 대해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제, “대입 3원칙은 오랜 기간 역사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일종의 사회적 규약의 성격이 있다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신중하고 진지하게, 또 역사가 주는 교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교육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수위의 교육정책 개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청와대가 인수위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논평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서 일일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며 인수위 측에서 흘러나오는 정책 기조들에 대한 논평을 삼갔다.

“3불(不) 정책”으로 불리는 대입 3원칙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금지를 말하는 것으로, 참여정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준거로 교육정책을 펼쳐왔으나, 인수위는 3불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생들을 하향 평준화했다며 이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천 수석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당시 “대한민국 교육 40년”이란 책을 이 당선인에게 건넨 사실을 거론하며 “인수위의 교육개혁이 상당히 급격하다는 느낌은 사실이며,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청와대가 인수위의 교육정책을 ‘급격한 변화’라고 우려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데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오른편)가 3일 서울 삼성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업무보고회를 갖고 국정홍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신용층 신용회복 공적자금 지원 총리실 축소 ‘대통령 보좌 기능’ 한정

■ 금감위·홍보처 등 인수위에 업무보고

이들께 진행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3일의 업무 보고는 금융감독위원회, 국정홍보처, 국무총리실,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등이 대상이었다.

이날 업무 보고 후 인수위가 밝힌 차기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은 ▲금산분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담당해온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대신 기자실을 복원하며 ▲역할과 기능면에서 방대해진 ‘이해찬표’ 총리실을 축소하는 것 등이다.

▷금감위=업무 보고 후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금감위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밝힌 대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되 컨소시엄이나 펀드에 우선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 등은 추가로 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와 금감위는 또 금융감독당국이 불신을 받는 이유는 복잡한 금

융감독체에서 비롯했다는 인식을 같이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시급한 대책이라고 공감하고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경제1분과위원회 장수만 전문위원은 “과거 기업들에 대해 수차례 부채를 탕감해줬고 IMF 이후 18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금융기관을 구제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보처=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담당해온 국정홍보처는 폐지하고 홍보처가 임기말 통폐합을 추진한 기자실을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수위는 홍보처가 폐지될 경우 해당기능을 문화관광부 또는 총리실 쪽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고에서 취재진화 방안에 대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언론의 접근권을 막고 알권리를 막는 것은 취재진화 퇴보”라고 지적하고 “조직의 존폐 여부를 떠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만큼 적극적 발상을

통해 대안을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노무현 대통령이 ‘분권형 총리’를 강조하며 청와대 못지않게 강화된 총리실의 위상이 순수한 ‘대통령 보좌 기능’ 쪽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변인은 “그간 총리의 위상에 따라 총리실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다. 실제총리, 책임총리로 변화하기도 했다”면서 “헌법 정신에 맞도록 가능한 중립기능을 잃고 대통령의 보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곳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리 비서실의 경우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기능이 중복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도 마찬가지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인사위, 법제처=인수위는 청와대와 행정부, 중앙인사위원회 간에 중복되는 고위직 공무원 인사 기능을 조정, 통합하기로 했다. 특히 인수위는 ‘철발통에 비유되는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인사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예비시험제도 마련, 채용 응시 연령 개선, 6급 이하 정년조정, 고위공무원 정년 개선책 등을 보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7년 수입 디젤 승용차 판매 1위
하늘을 덮은 차, 푸조 307SW HDi

www.peugeot.co.kr

세제 국감이 합조성식도

307 SW PEUGEOT

풀물버스 모터스(주)

■ 광주 점서함 062-388-0400 ■ 광주 서해스 센터 062-388-0400